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063-280-7141)
▪담당자 : 지역개발연구부 오병록 연구위원
(063-280-7165)

보도시점 : 2021년 12월 9일(목)부터

**포스트코로나 공간계획,
‘선택적 집중’ 과 분산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과 소 화 마 을 의 무 조 건 적 인 이 전 보 다 는
마 을 의 잠 재 력 을 활 용 한 특 화 마 을 로 활 성 화**
[사진 및 영상자료 : 없음]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전라북도 공간계획과 공간활용 방향은 ‘선택적 집중’과 ‘분산’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간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실내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제한된 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인 공원과 개인 이동수단인 자전거 및 킥보드의 이용은 증가하는 등 활동 패턴과 공간의 활용이 분산을 지향하고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집중과 분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라북도 공간계획”(통권 257호)에서, 전라북도 공간계획의 방향을 기존의 집중과 과밀에서 ‘선택적 집중’과 ‘분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집중과 과밀, 그에 따른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공중위생에 대한 대응으로 근대 도시계획이 출발하였듯이, 현대에도 대도시,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도심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인구 집중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도시계획 원칙에 따라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과소화마을의 주민들을 인근 거점마을로 이주시켜 집중시키는 콤팩트시티와 같은 도시정책이 지방소멸의 해법처럼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러한 집중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오병록 연구위원(지역개발연구부)은 “과소화마을의 소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마을의 인구감소 속도와 마을의 보유자원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의 여건에 따라 거점마을로 이전, 마을 활성화, 자원활용 인구유입, 특화마을 조성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도시 내에 산재, 분포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시가지 내 오픈스페이스를 확대하고, 시가지 외곽의 녹지와 연결하여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접촉 없이 이동하는 PM(개인형 교통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요 거점들 및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대학가를 상호 연결하는 PM-Road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